





해외통관애로

EU 관세행정 발전방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정재호 | 주벨기에 및 유럽연합 한국대사관 관세관

EU 관세행정 발전방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1.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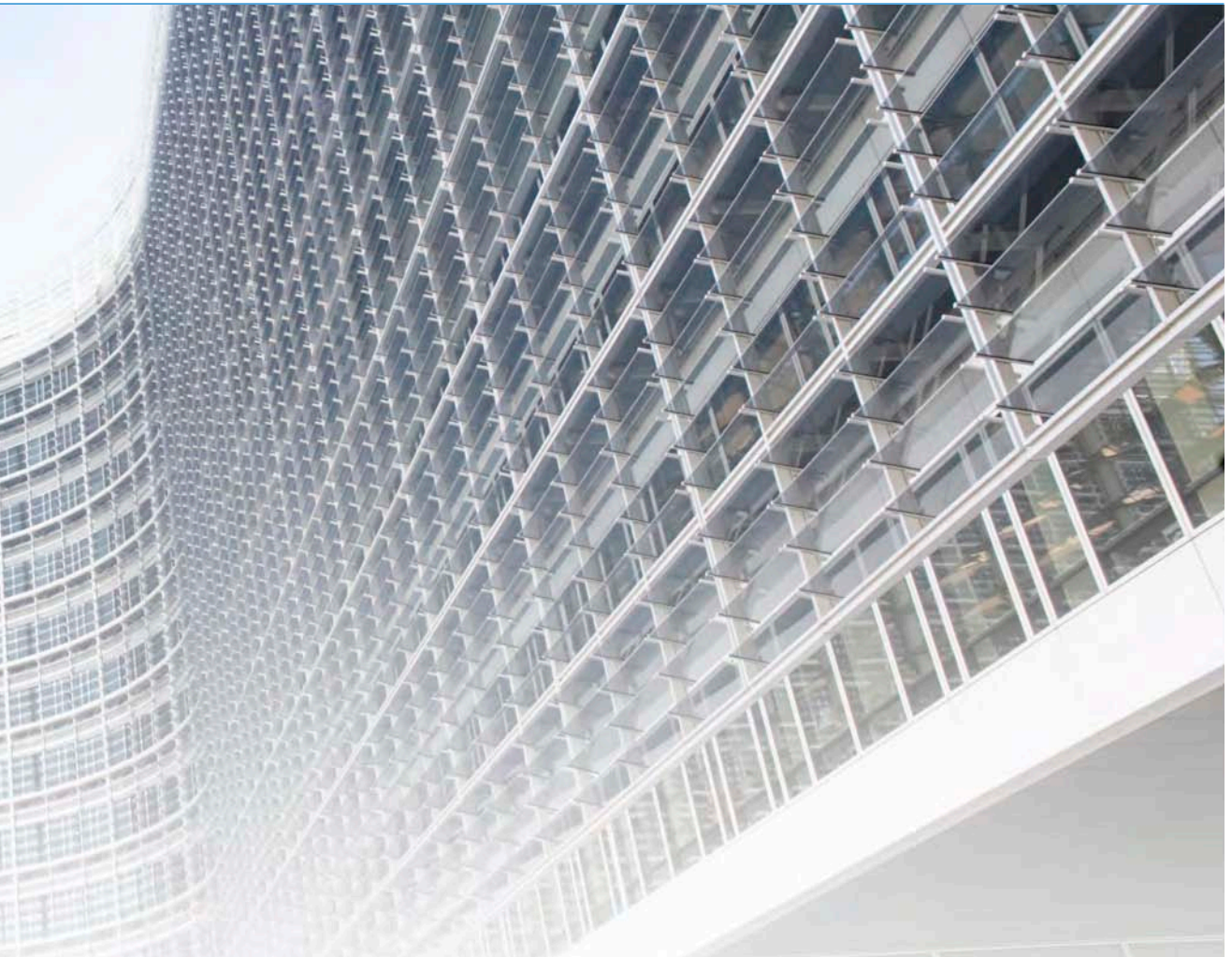
EU는 하나의 관세동맹을 기초로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단일시장으로서 2019년 기준 세계무역 비중은 15.3%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으로 발전해 왔으며, EU의 관세동맹은 EU 공동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EU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EU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이 중심에 27개 관세당국은 매일 약 85만건의 수출입신고를 처리하고, 매월 약 33백만유로(40백만 달러 상당) 상당 규모의 수출입통관 물류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및 통제 책임이 있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재호

주벨기에 및 유럽연합
한국대사관 관세관



그러나 2016년 EU 공동관세법의 대대적 개정을 거쳐 통일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관세 및 수입부가세의 회피 증가, 위조 및 불량(unsafe) 물품의 밀수 증가, 27개 회원국간 관세통제의 불균형 및 취약국가로의 불법 반출입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등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공동된 대응이 미흡하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탄력적 통관행정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EU 집행위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향후 4년간 EU 관세동맹을 보다 스마트하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합된 관세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위험관리에 기반한 지능적인 무역공급망 감독을 통해 EU 사회·환경·경제를 보호하고, 통관행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관세행정의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27개 회원국이 하나의 관세동맹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위험관리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compliance) ▲단일 관세행정 4대 부문별로 총 17개 세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훑어보고 우리가 함께 대응해 나갈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EU 관세행정 발전방향

1) 효과적 세관위험관리

① EU 공동분석역량(JAC) 강화

EU내 다양한 국경관리기관의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어 풍부한 관련 data가 생성되고 있으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이 미흡하여 위험관리에 취약성을

드러낸 바, 세관 및 비세관 출처의 수출입데이터의 수집·공유 및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개선된 수입통제 시스템(ICS2)의 3단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1.12	ICS2의 수출입추세 분석툴 및 감시데이터 분석툴 구축
2023.12	감시데이터의 데이터셋(data set) 확대 위조상품(COPIS), 위조방지정보(AFIS), 부가세납부정보 시스템과 연계 우편, 특송(express), 항공화물 도착전정보 분석 시행
2024.12	해상, 도로, 항공운송업자 및 물류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사전적하 및 도착전 사전정보 분석 시행

② 위험관리전략 개편

또한, EU에서는 현행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보다 즉각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개편하여 무역관련

금융 및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추진한다.

(2021 Q2) 재무위험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강화, 비금융리스크 및 전자상거래 대응을 포함한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새로운 위험관리전략(New Risk Management Strategy) 수립

2) 전자상거래 관리 강화

① 통관목적의 VAT 데이터 활용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의 VAT 과세정보에 대한 관세당국의 직접적 접근성을 확대하여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및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세관과 조세당국간 무역 사기예방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한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2.12	Eurofisc 조세정보허브*와 세관망 직접 연결시스템 개발
2024.1	VAT 납부정보 data에 대한 세관의 접근가능성을 평가하고, 2024년 1월까지 최종해결방안을 제안

* 'Eurofisc'는 EU회원국간 조세사기 정보의 처리·분석·후속조치를 위해 구축된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업자의 역할 및 의무 재검토

2021년 7월부터 수입원스톱샵(IOS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는 플랫폼내에서 세무당국에 특정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부여

되는데, 전자상거래 통관목적으로 동 플랫폼에서 관세당국에 신고의무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1.12	전자상거래가 관세징수 및 EU사업자의 공평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3.Q1	플랫폼내 관세당국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UCC) 개정 마련



3) 법규준수 강화 및 촉진

① AEO 프로그램 강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 공인경제운영자 (AEO) 프로그램에 대해 세관 위험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AEO업체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회원국

들의 철저한 이행과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021.Q3) 회원국들에게 철저한 이행 및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제안 및 AEO 지침의 업데이트 추진

② EU 싱글윈도우(S/W) 환경 개발 및 구축

보다 강력한 통제와 무역촉진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관, 보건, 환경, 식품안전 등 여러 목적의 국경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연계하고, 싱글

윈도우 환경내에서 정보의 협업적 처리, 공유, 교환 및 강화된 위험평가를 통해 보다 빠른 통관절차를 수행한다.

(2020.Q4) EU 세관싱글윈도우(S/W) 환경 구축 입법안 제시

참고로,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28일 동 행동 계획의 첫번째 조치로서 EU 싱글윈도우 입법 제안서 (Proposal for EU 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를 제출하고, 서로 다른 당국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능률화 하여 여러 포털을 통해 문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단일 창구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국경통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관련 구체적 사항은 EU 관세총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201028_commission_proposal_single_window.pdf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eneral-information-customs/electronic-customs/eu-single-window-environment-for-customs_en

③ 공동관세법(UCC)에 대한 평가

2016년부터 현대화된 공동관세법(UCC)에 따라 완전한 서류없는 전자통관(paperless)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바, 특히 코비드-19와 같은 위기상황 및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 환경에서 동 시스템이 현대화·간소화에 적합하는지 또는 탄력

적 대처가 가능한지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를 실시하고 공동관세법의 개정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UCC 전자통관 17개 시스템 중 현재 9개 시스템이 정상 구축 가동 중이며, 2025년 말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UCC Work Program)

(2021.Q4) 공동관세법(UCC)에 대한 중간보고서 작성

④ 세관제재에 대한 공동체계 구축

하나의 관세영역으로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동된 제재를 목적으로 각 회원국의 개별제재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동된 제재기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1.Q4	국가별 제재기준에 관한 지침 마련
2022.12	불이행 제재와 관련 법률제안의 필요성 검토

⑤ 관세사기(customs fraud) 대응 규정 재검토

EU 회원국내 협력 및 정보교환 규정(EC No.515/9718)은 EU영역에서의 관세사기 예방의 주요 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새로운 사기형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재검토하여 새로운 관세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1.Q1) 사기에 대한 대응여부 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정개정 필요성 재평가



⑥ 위조 및 안전취약 수입물품에 대한 대응

최근 Covid-19위기에서 불법제조·위조된 안전취약 보호장비 등의 반입으로 통관감시의 필요성이 재부각되었고, 2021년 시행되는 시장감시와 준수에

관한 규정(EU 2019/1020)에 맞춰 위조 및 안전취약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개입 및 효과적 협력을 강화한다.

(2021~2025) 통관행정 관련 시장감시 이행입법 마련(2021) 및 EU차원의 관세와 시장감시 시스템 간* 연계프로그램 개발(~2025)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pan-European Market Surveillance (ICSMS) and the EU 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

⑦ 특혜무역협정 원산지규정 모니터링

특혜무역 증가로 시장접근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우회적인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EU의 수출입 무역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혜원산지 이행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규칙의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등 특혜협정 체결국과 원산지 위반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 및 절차 모니터링 확대, 원산지규정 및 절차 위반시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EU 이익 보호

⑧ 주요 교역상대국(특히 중국)과 관세 관련 국제협력 강화

EU에서는 주요 교역상대국과 관세문제 및 다자간 협력차원에서 상호행정지원 개선 및 강화를 추진 하되, 쌍방 교역규모 및 전자상거래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감안하여 중국 및 여타 교역상대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하고자 한다.

* EU는 중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세관문서의 전자적 교환 촉진, 온라인 판매제품 안전에 관한 이행, 위험관리 및 공급망 보안 지원, 관세정보 교환, AEO 상호인정 다양한 분야 협력을 추진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0.12	중국과 관세협력 전략프레임워크(2021~2024) 합의 예정
2021.12	국제협력 및 관세분야 상호행정협력체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 착수 및 개선안 제안

4) 단일 관세행정(Customs working as one)

① 세관, 보안당국, 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 등

EU의 외부국경과 내부보안 측면에서 관세정보 시스템과 기타 정보시스템간 격차 해소 및 상호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회원국의 보안·국경관리·세관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권고한 보안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쉥겐정보시스템 (Schengen Information System) 및 Europol 데이터와 3단계 수입통제시스템(ICS2)과의 연계를 검토중이다.

(2021.12) 3단계 ICS2 최종 구축시점(2024년) 까지 모든 데이터 연계 완료로 쉥겐정보 시스템과 Europol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개발 타당성 연구 완료

② 관세동맹 성과평가

관세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연간 및 분기별 성과지표 제출이 회원국의 자발적 의사(voluntary basis)로만 진행되어 평가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주요 성과지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동맹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2021.12) 관세정책결정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자발적 보고방식의 문제점 및 법적 프레임 워크의 필요성 평가



③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관감시장비 구축

EU는 2021~2027 다년간재정계획(MFF)내 관세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여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동등한 수준으로 세관감시망 구축을 추진한다.

* 2021~2027 MFF 관세예산은 최첨단 세관감시장비(X선, 스캐너, 휴대용 장치, 번호판 자동 인식 등) 구입 예산을 반영하여 230% 이상 증액된 950백만유로가 편성됨

(2021~) 2021년부터 회원국간 통일된 세관감시망 구축 추진

④ MFF 2021~2027내 관세프로그램 협력매커니즘 강화

MFF내 관세프로그램을 통해 관세동맹의 기능 및 현대화를 지원하고 내부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 세관당국간 협력을 촉진한다.

(2021~2028) EU 집행위 차원에서 EU 회원국에 대한 공통교육 및 세관전문교육 등 인적역량을 강화를 포함한 관세행정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⑤ 관세동맹의 효율적 관리방안

현재 직면하고 있는 Covid-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그간의 EU 집행위 입법조치, 세관당국과 무역업자를 위한 세관절차 해석지침과 함께 공동관세법의 통관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행 법령의 개선 필요성, 미래대비에

대한 상시 연구의 필요성, 신속대응 매커니즘 등 관세동맹하에서의 최선책을 탐구하는 검토그룹(reflecting group) 설립이 요구되며, 보다 개선된 조직의 필요성과 기관의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간	세부 행동계획
2021.Q1	미래연구/위기관리 이해관계자 검토그룹 출범
2022~2023	관세협력영역을 포괄하는 기관 설립에 대한 찬반 등 영향평가 실시

3. 맺음말

EU는 지난 2016년 공동관세법(UCC) 개정을 통해 EU내 통일된 관세행정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회원국별 재정지출 차이 및 지원미흡, 행정격차 등으로 세관전산화 기본계획(Work Program)이 지연*되어 하나의 관세동맹으로서의 관세행정 수행에 미흡하였음을 평가하고, 향후 일관성 있고 강력한 관세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 행동계획들을 마련하였다.

* 2016년 추진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계획(Work Program)은 당초 2020년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회원국간 협력 부족 등으로 2025년까지로 순연

이번 조치들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세관 및 비세관 출처의 데이터 관리, 공유 및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 외부국경에서의 회원국의 단일한 관세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U역내의 안전과 이익 확보를 위해 세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회원국의 공통된 세관절차 집행을 위한 EU 집행위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행동계획은 향후 4년간의 EU의 관세행정 발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서 특히 EU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의 단계적 구축에 따라 통관절차의 개선 및 변화가 예상되며, EU내 통일된 통관시스템 운영으로 그동안 EU 각 회원국간 차별적인 통관관행이 완화되고, 더 빠르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개선 효과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절차의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와의 불법무역 관련 정보협력 확대, AEO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이행 강화, FTA 원산지검증 등 위반여부 감독 강화 등 양자간 관세협력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과 EU 양자간 무역 확대 및 원활한 관세협력을 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점검도 필요하다.

끝으로, EU는 한단계 높은 수준의 관세동맹을 지향하며, 관세동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경 통제기관 설립여부 검토 등 상시적 미래 대비와 보다는 통일된 관세행정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거대 관세동맹의 선두주자인 EU의 관세행정 변화를 유의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